

2008년 하반기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 공동 국제인식조사
EAI 여론브리핑 39호: 에너지 정책전환 요구하는 세계

대표집필 : 정한울 · 곽소희

제4차 발표

21개국 여론조사 (엠바고 GMT 2008. 11. 19 21:01-한국시간 2008. 11. 20. 05:00)

차수	한국발표	주제	비고
1차	9월 11일	9.11 테러의 배후에 대한 국제인식 비교	9 · 11 테러 7주기
2차	10월 16일	세계 기아문제와 선진국의 책임	세계 식량의 날 (10.15)
3차	11월 10일	복지시대의 복원? 복지는 정부 책임	
4차	11월 20일	에너지 정책전환 시급, 한국인은 가장 민감	

발표내용

1. 세계인, 비용 들더라도 대체에너지 개발이 해법 “장기적으로는 이득될 것”
 - 핵 · 화력발전 대신 태양열 · 풍력설비 늘려야; 한국인은 핵 의존도 상대적으로 높아
2. 에너지 해소전략 : 정부 주도·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높여야
 - 정부는 대체에너지 설비 법제화, 기업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소비자는 비용분담
 - 에너지 효율화로 인한 가격 상승 OK, 소비자에 세금 부과에는 찬반 엇갈려

조사개요

2008년 두 번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국제여론조사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2008년 상반기에 진행한 국제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조사로서 국제현안 및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을 소개한다.

경향신문사 · EAI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연구팀

조사국가 : 22개국 (조사기간 2008. 7.15-9.26)

미주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유럽/유라시아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중동	아제르바이잔, 팔레스타인, 터키, 이집트, 요르단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 대만은 전체 평균산정 시 제외

연구팀

연구팀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연구진 :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신영환(EAI 외교안보센터), 곽소희(EAI 연구원)
문의 : 정한울(hwjeong@eai.or.kr 02-2277-1683 내선 102, Fax: 02-2277-1684)

한국 조사방법론

조사일시 : 2008.8.28~29
조사대상 : 19세 이상 전국성인남녀
표본수 : 600명
표본추출 : 층화확률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pm 4.0\%$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20.5%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부록1. 조사방법론**부록2. 국제여론조사 연구협력기관**

이슈1. 세계인이 생각하는 에너지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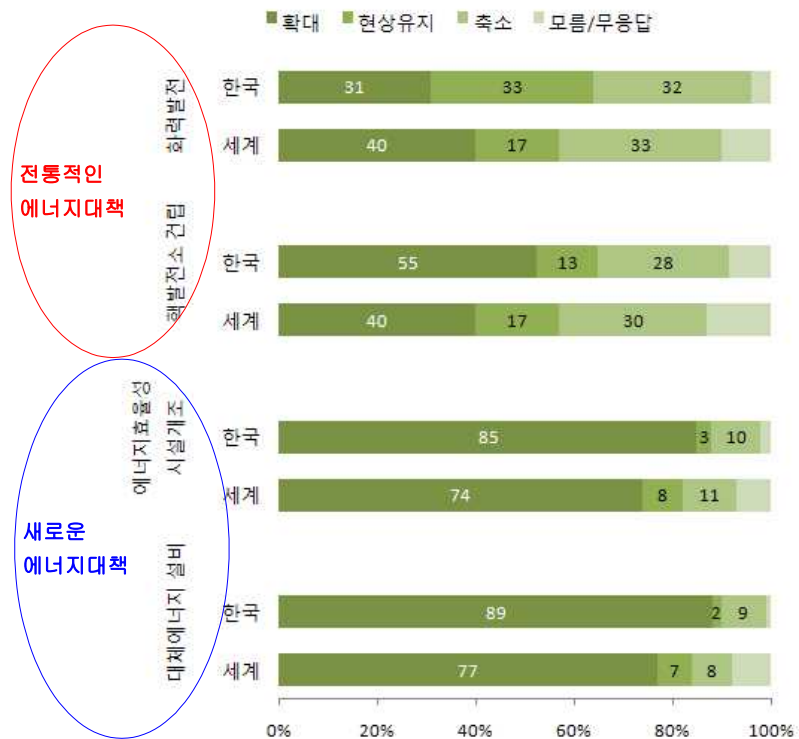
• 세계인, 비용 들더라도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사회로 전환이 해법

77%, 태양열·풍력설비 늘려야; 73% “에너지 효율성 높여야”; 핵, 화력발전 확대는 40% 불과
선진국·무역의존도 큰 국가일수록 대체에너지개발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에 관심
주요 에너지 수출국, 후발 공업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소극적

을 상반기 하늘 모르고 치솟던 국제유가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세계인의 대다수는 태양력·풍력발전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설비로의 전환을 에너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여론연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이 세계 21개국 20,7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과 경향신문이 한국인의 여론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대체에너지 시설의 확대를 에너지 위기 해법으로 주장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7%에 달했고, 건물 개조 등을 통해 사회적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려 73%가 동의했다. 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새롭고도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존의 주유에너지원인 핵 발전소나 석유/석탄자원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단기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여론은 각각 40%에 불과했다.

[그림1] 에너지 위기 해법



전통적인
에너지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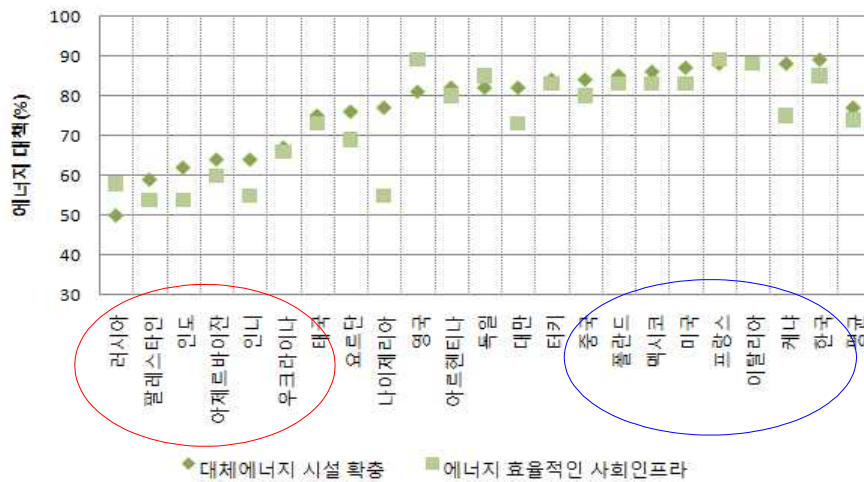
새로운
에너지대책

그러나 나라별 산업 구조나 부존자원의 규모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산품의 생산과 수출이 중요한 산업기반이 되는 선진국이나 신흥 공업국처럼 제품생산 및 수출을 위해 에너지 소비가 불가피한 경우,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설비의 대체 같은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수출이 국부의 주요원천이 되는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존 에너지 생산시설의 확대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사회의 주요시설물을 에너지 효율성이 높게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80%를 넘었다. 제조업수출 비중이 커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고민이 큰 한국이나 대만, 중국 같은 주요 무역 국가들에서도 대체에너지 시설확충과 고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인프라 구축을 선호하는 여론이 80%를 넘어선다.

반면 석유자원이 풍부한 주요 석유수출국이나 제조업 토대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중동과 함께 세계 석유수출을 주도하는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지가 50~60%대에 머물렀다.

[그림2] 국가별 대체에너지 시설 확대/에너지 효율적인 사회인프라 구축 찬성 분포



* 각 나라별 수치는 아래 표1 참조

[표1] 국가별 대체에너지 시설 확대/에너지 효율적인 사회인프라 구축 찬성 비율(%)

국가	러시아	팔레스타인	인도	아제르바이잔	인니	우크라이나	태국	오만	나이지리아	영국	아르헨티나	독일	대만	터키	중국	폴란드	멕시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케냐	한국	평균
대체에너지시설확충	50	59	62	64	64	67	75	76	77	81	82	82	82	84	84	85	86	87	88	88	88	89	77
에너지효율적 사회 인프라	58	54	54	60	55	66	73	69	55	89	80	85	73	83	80	83	83	83	89	88	75	85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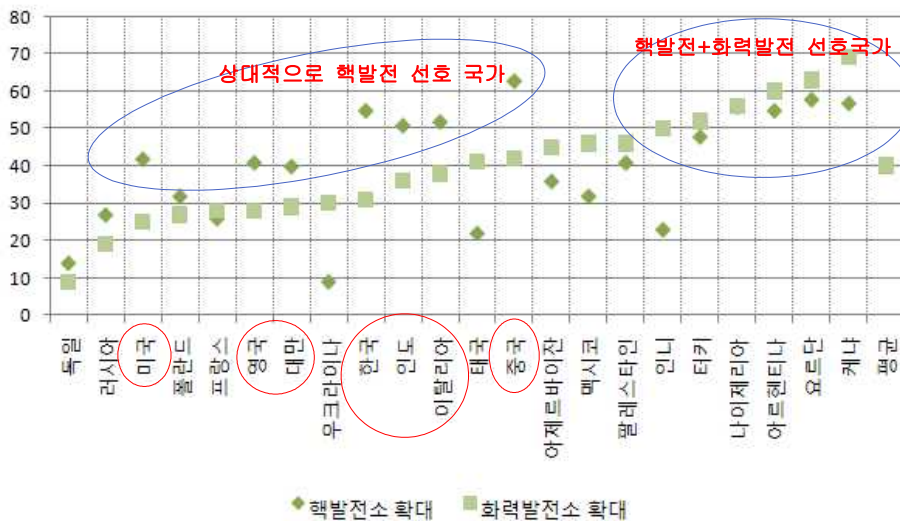
주: 회색국가는 OECD 국가 및 주요 무역국가(대만/중국)

- 후발경제국, 에너지자원 풍부한 국가, 전통적인 에너지 대책(핵, 화력발전) 선호
 핵발전소 확대: 요르단 58%, 케냐 57%, 나이지리아 56%, 아르헨티나 55%
 화력발전소 확대: 케냐 69%, 요르단 63%, 아르헨티나 60%, 나이지리아 56%
- 무역·에너지 해외의존도 높은 국가, 원자력 선호, 구 소연방 국가는 원자력 비호감
 중국 63%, 한국 55%, 이탈리아 52%, 인도 51%, 미/영은 화력보다는 원전 선호

후발경제국이나 전통적인 에너지원이 풍부한 나라의 국민들은 새롭고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보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석유/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주장한 비율을 보면 요르단 58%, 케냐 57%, 나이지리아 56%, 아르헨티나 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들 국가들은 화력발전소 확대 응답에서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케냐 69%, 요르단 63%, 아르헨티나 60%, 나이지리아의 경우 56%였다.

한편, 상당한 원전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한국, 아르헨티나는 물론 1988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다 최근 20년 만에 원전 재가동 선언한 이탈리아 등 에너지 수급이 절실한 국가들에서 석유/석탄에 의존한 화력발전보다 원전에 기대를 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의 경우 63%, 한국 55%, 이탈리아 52, 인도 51%의 국민들이 에너지 문제 해결 대책으로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꼽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원전기술을 자랑하는 미국(42%), 영국(41%)의 경우 화력발전에 비해 원전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았다. 체르노빌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러시아(27%)와 우크라이나(9%) 등 구 소연방 국가에서는 원전 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그림3] 국가별 핵발전 확대 및 화력(석유/석탄)발전 선호 분포



* 각 나라별 수치는 아래 표1 참조

[표2] 국가별 핵발전 확대 및 화력(석유/석탄)발전 선호 비율(%)

국가	독일	러시아	미국	폴란드	프랑스	영국	대만	우크라이나	한국	인도	이탈리아	태국	중국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팔레스	인니	터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요르단	케냐	평균
핵발전소확대	14	27	42	32	26	41	40	9	55	51	52	22	63	36	32	41	23	48	56	55	58	57	40
화력발전소확대	9	19	25	27	28	28	29	30	31	36	38	41	42	45	46	46	50	52	56	60	63	69	40

주: 회색국가는 핵발전과 화력발전 동시 선호 국가, 굵은 테두리 국가는 핵발전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이슈2. 세계인이 생각하는 에너지 대책 추진전략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높여야

- 에너지 위기 해소전략 : 정부 주도 · 기업과 소비자 공동의 책임 높여야
 - 공공시설의 대체에너지 설비 및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책임을 규제, 소비자는 비용분담
 - 소비자 분담 : 직접적인 방식보다 간접적인 방식을 더 선호
에너지 효율화로 인한 가격 상승 OK, 소비자에 세금 부과에는 찬반 엇갈려

조사에 참여한 각국 국민들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기업, 소비자의 공동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더라도 공공시설부터 태양열/풍력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21개국 국민들 중 69%가 찬성했다. 러시아(36%), 아제르바이젠(48%)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들에서 대체에너지 설비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96%로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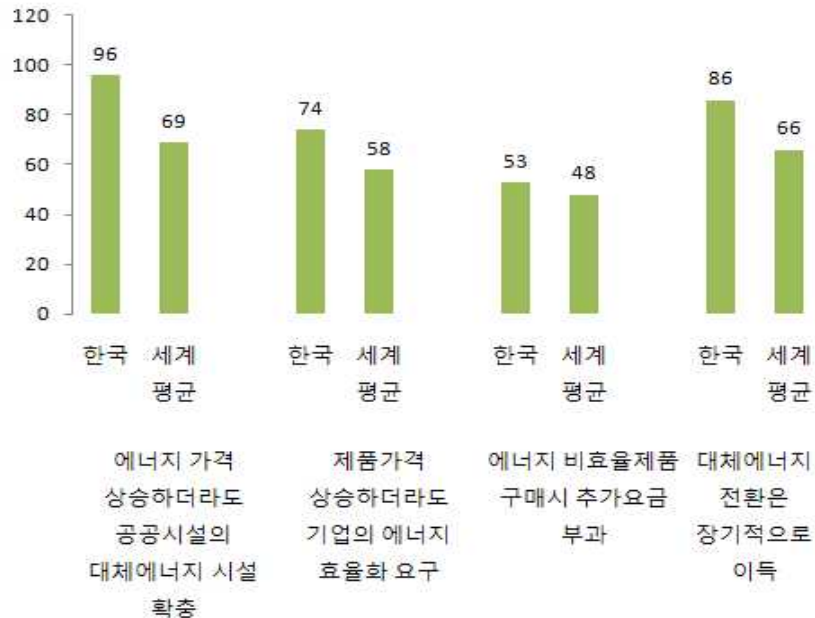
또한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더라도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8%가 동의했다.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응답자가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업의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프랑스(72%)나 영국 국민(79%)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에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아온 미국에서도 61%의 응답자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문제를 남다르게 체감하고 있는 한국(74%), 대만(80%), 중국(66%) 등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주도로 공공시설에 대체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업 활동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조세증가나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본 조사에서 대부분 나라의 국민들이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제품이 가격이 상승하는 조건 하에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함으로써 에너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비자들도 분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책임 인식이 형성된 데는 에너지 개발 및 효율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생기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체 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21%에 그쳤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주장에 66%가 동의했다. 한국은 86%가 동의해 역시 21개국 중 가장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

소비자들도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데에는 거부감이 덜한 반면(69% 찬성),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제품가격 상승할 때는 동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58% 찬성). 더구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자동차나 가전제품 모델을 구매할 때 추가 요금을 소비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의 경우 찬성 여론이 48%에 그쳤다. 반대 입장이 39%, 잘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응답도 13%에 달했다. 에너지 문제 해소 비용을 개별 소비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소비자들도 공동책임

이 있다는 데에는 당위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역시 직접적으로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그림4]

[그림4]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들에 대한 동의비율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경제효과 (%)



- **한국인, 에너지 불안 심각, 대안적인 에너지 대책의 필요성 절감**
· 대체에너지 시설 확충해야 89%, 에너지 효율 높은 사회시설 구축 85%
-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확충에 대한 의존, 상대적으로 높아**
· 원자력 발전소 확대 55%, 화력발전소 확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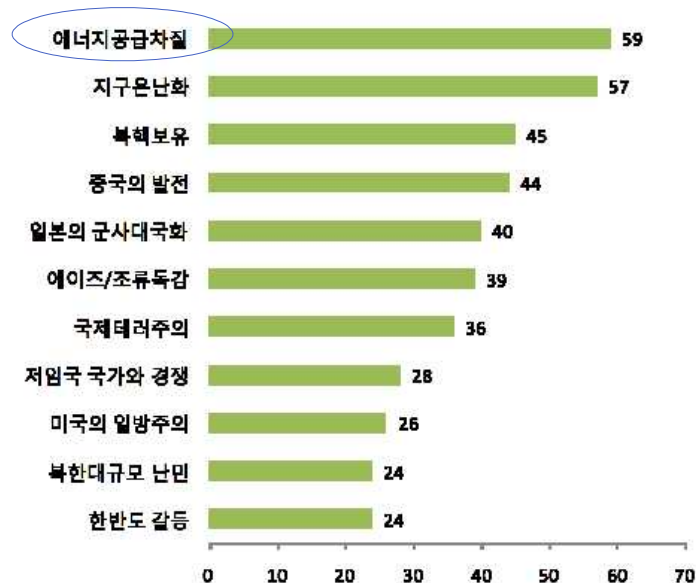
한국인들의 에너지 위기의식이 심각하다. 2008년 2월에 실시한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 국익에 위협이 될 여러 요인에 대해 평가한 결과 에너지 공급 불안 문제에 매우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 위협(45%)이나 중국의 부상(44%), 일본의 군사대국화(40%), 테러리즘(36%)로부터 비롯되는 위협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그림5]. 높은 무역의존도와 공산품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은 국가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율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당장 국내경제가 입을 피해는 올해 있었던 유가 폭등시기에 충분히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한국에서 대안적인 에너지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려 89%가 동의함으로써 조사를 진행한 21개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존의 사회시설물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시설로 교체,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

의 85%가 찬성했다. 이에 반해 석유,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확충을 대안으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31%, 55%였다[그림1].

대안적 에너지 대책에 동의한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원자력 발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21개국 조사대상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에너지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사회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질적인 에너지 대책에 대한 선호가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책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석유/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이고 국제유가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5] 한국인의 안보위협인식(%): “매우 위험”



자료: EAI · CCGA(2008)

*10년 이내에 한국의 국익에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위험”, “다소 위험”, “전혀 위협이 안됨” 중 “매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

[부록1] 방법론 요약 (출처: 월드퍼블릭오피니언 www.WorldPublicOpinion.org)

METHODOLOGY

Country	Sample Size (unweighted)	MoE (%)	Field dates	Survey methodology	Type of sample
Argentina	679	3.8	August 20-29, 2008	Face-to-face	Urban ¹
Azerbaijan	600	4.1	August 10-31, 2008	Face-to-face	National
China	1011	3.2	Jul 26 – Aug 2, 2008	Telephone	National ²
<i>Hong Kong</i>	<i>1008</i>	<i>3.1</i>	<i>Aug 27 – Nov 4, 2008</i>	<i>Telephone</i>	<i>Representative of Hong Kong</i>
<i>Macau</i>	<i>1089</i>	<i>3.0</i>	<i>August 11-20, 2008</i>	<i>Telephone</i>	<i>Representative of Macau</i>
<i>Taiwan</i>	<i>823</i>	<i>3.5</i>	<i>August 22-31, 2008</i>	<i>Telephone</i>	<i>Representative of Taiwan</i>
France	600	4.1	August 5 - 12, 2008	Telephone	National
Germany	1008	3.1	Jul 15 – Aug 12, 2008	Telephone	National
Great Britain	803	3.5	Jul 31 – Aug 8, 2008	Telephone	National
India	1118	3.0	Aug 30 – Sep 2, 2008	Face-to-face	National ³
Indonesia	716	3.7	Jul 26 – Aug 18, 2008	Face-to-face	National ⁴
Italy	600	4.1	July 16-30 and Sep 4-10, 2008	Telephone	National
Jordan	583	4.1	August 12-15, 2008	Face-to-face	National
Kenya	1000	3.2	July 17-30, 2008	Face-to-face	National
Mexico	850	3.4	August 9-10, 2008	Telephone	National ⁵
Nigeria	1000	3.2	August 9-18, 2008	Face-to-face	National ⁶
Palestinian territories	638	4.0	August 1-7, 2008	Face-to-face	National ⁷
Poland	1094	3.0	Jun 30 – Jul 8, 2008	Face-to-face	National

[계속]

Russia	800	3.5	August 15-20, 2008	Face-to-Face	National
South Korea	600	4.1	August 28-29, 2008	Telephone	National
Thailand	2223	2.1	September 1-25, 2008	Face-to-face	National ⁸
Turkey	1023	3.1	Jul 28 – Aug 18, 2008	Face-to-face	National
Ukraine	1043	3.1	Aug 30 – Sep 9, 2008	Face-to-face	National
United States	889	3.4	August 9-20, 2008	Internet ⁹	National

¹ In Argentina, the survey was executed in the urban areas of Capital Federal and Gran Buenos Aires, representing 35 percent of Argentina's population.

² In China, the survey was a probability sample of urban and rural households with land-line telephones in the provinces of Anhui, Hebei, Heilongjiang, Hubei, Jiangsu, Shanxi, Shanghai, Sichuan, and Yunnan—representing approximately 60 percent of the mainland Chinese population. The sample was 40 percent rural, 60 percent urban (rural households make up approximately 55 percent of the population).

³ In India,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in urban and rural areas in 14 of the largest Indian states; these states comprise 77 percent of India's population. The sample is 60 percent urban, India's population is approximately 30 percent urban.

⁴ In Indonesia,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was conducted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and covering approximately 87 percent of Indonesia's population.

⁵ In Mexico, a random telephone sample of adults who had landline telephones was conducted in all 31 states and the Federal District. Telephone penetration in Mexico is 55 percent.

⁶ In Nigeria, the sample was developed by selecting six states, one per geographic region, based upon their size and representativeness. Within each state, sampling points were selected by means of a multi-stage random sample which disproportionately sampled urban areas. The final sample is 75 percent urban; Nigeria is approximately 50 percent urban.

⁷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a face-to-face national probability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population of the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the Gaza Strip.

⁸ In Thailand, the survey was conducted in 9 provinces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Samutprakam, Chanthaburi, Khonkaen, Chiang Mai, Kamphaengphet, Sakonnakhon, Chumphon, and Songkhla.

⁹ In the United States, the poll was an online survey drawn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Knowledge Networks online panel. This panel is probabilistically-based, selected from the population of US telephone households and subsequently provided with an Internet connection if needed.

[부록2] WPO 프로젝트 연구협력기관 (RESEARCH PARTNERS)

WORLDPUBLICOPINION.ORG

RESEARCH PARTNERS

Country	Research Center	Contact
Argentina	Graciela Romer y Asociados	Ms. Graciela C. Römer graciela@romer.com.ar (+54-11) 4345-2864/5
Azerbaijan	International Center for Social Research	Dr. Tair Faradov tfaradov@yahoo.com (+99 412) 492 27 34/672 22 49
China	Fudan Media and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 (FMORC), Fudan University	Dr. Baohua Zhou zhoubaohua@yeah.net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ublic Opinion Programme	Dr. Robert Chung robert.chung@hku.hk +852 2859-2988
Macau	University of Macau	Dr. Angus, W.H. Cheong anguswhc@umac.mo +853 8397 4437
Taiwan	TVBS	Mr. Yeh-Diing Wang ydwang@tvbs.com.tw +886-2-23568961
France	Efficiencie 3	Mr. Samuel Lee samuel.l@efficiencie3.com +33 3 26 79 03 59
Germany	Ri*Questa GmbH	Dr. Bernhard Rieder riquesta.rieder@t-online.de +49 (0)7641 934336
Great Britain	Chatham Hous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Facts International	Dr. Robin Niblett rniblett@chathamhouse.org.uk +44 (0)20 7957 5702
India	Centre for Voting Opinion & Trends in Election Research (CVoter)	Mr. Yashwant Deshmukh yashwant@teamcvoter.com 91 120 4247135
Indonesia	Synovate	Ms. Eva Yusuf Eva.Yusuf@synovate.com (+62-21) 2525 608

[계속]

Italy	Demoskopoea	Ms. Clara Mariotti mariotti@demoskopoea.it +39 06 85.37.52.26
Jordan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University of Jordan	Dr. Fares Braizat f.braizat@gmail.com (+962 6) 5300100
Kenya	Research Path Associates Limited	Mr. Stephen Dimolo Ashers steve.ashers@rpa.co.ke +254-20-2734770
Mexico	Reforma	Dr. Alejandro Moreno alejandromoreno@reforma.com +52 56 28 72 35
Nigeria	Market Trends Research International	Mr. Michael Umogun m.umogun@research-intng.com + 234-1 791 79 87
Palestinian territories	Palestinian Center for Public Opinion	Dr. Nabil Kukali kukali@p-ol.com (+972-2) 2774846
Poland	CBOS	Dr. Mirosława Grabowska m.grabowska@cbos.pl (+0-22) 693 47 25 / 693 46 93
Russia	Levada Center	Ms. Ludmila Khakhulina lkhahul@levada.ru (+7 095) 229-55-44
South Korea	East Asia Institute	Dr. Han Wool Jeong hwjeong@eai.or.kr +82 02-2277-1683
Turkey	ARI Foundation / Infakto Research Workshop	Mr. Yurter Ozcan Yurter@arifoundation.org +1 (804) 868 0123 Dr. Emre Erdogan emre.erdogan@infakto.com.tr +90 212 231 07 08
Thailand	ABAC Poll Research Center, Assumption University	Dr. Noppadon Kannika noppadonknn@au.edu +66-2-719-1550
Ukraine	Kie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Dr. Vladimir Illich Paniotto paniotto@kmis.kiev.ua (+38) 044 537-3376 / (+38) 044 501-7403
United States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 Knowledge Networks	Dr. Stephen Weber sweber@pipa.org +1-202-232-7500 Dr. Michael Dennis mdennis@knowledgenetworks.com +1-650-289-2160